

## 후속보도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신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목	[보도자료] [기자회견]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국회의원과 성소수자 - HIV/AIDS인권운동 - 그리스도인이 요구한다.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실현하라”
발신일	: 2022년 1월 5일(수)
문의	: 이종걸(집행위원,

**성소수자 - HIV/AIDS인권운동 - 그리스도인이 요구한다.**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실현하라”**

- 일시 : 2022년 1월 5일(수) 10시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이상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진행 :  
사회 | 이종걸(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1. 차별금지법/ 평등법 대표발의 의원 발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2. 시민사회 발언**  
고운(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자캐오(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소주(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3. 기자회견문 낭독**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현재 21대 국회에는 4건의 평등법/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국제인권기구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70%가 넘는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회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한편으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두는 것을 문제삼는 일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은 국제인권규범과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명백하게 차별금지사유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비롯해 누구도 배제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4. 그렇기에 평등법/차별금지법 발의의원 4인과 성소수자-HIV/AIDS 감염인-그리스도인들은 2022년 임인년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의 해가 되기를 촉구하며, 더 이상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주장이 국회에 더 이상 설 수 없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 기자회견문 / 시민사회 발언문

**[기자회견문]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실현하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21대 국회 현재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국제인권기구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70%가 넘는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의 나중이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핑계가 이제는 무색하다. 국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들이다.

2022년 임인년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해가 될 것이다. 지난 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해 벌인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제정운동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제정 논의를 회피할 수 없는 국면까지 만들었다. 20대 대선 정국 속에서도 시민들은 질의와 요구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시급성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건넸다. 시민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우리 사회에 그냥 있으면 좋은 법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내 일상에 필요한, 절박한 법임을 알렸다. 존재의 인정 문제가 왜 시급한 것인지를 소수자들이 직접 존재를 드러내어 말했고, 생계와 노동의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별과 연결되어 있기에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일상 속의 차별을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박함을 국회는 이제 더 이상 뭉갤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두는 것을 아직도 문제 삼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은 국제인권규범과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명백하게 차별금지사유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비롯해 누구도 배제 없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점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있어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또한 15년이 넘도록 성소수자의 존재를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만들어온 책임은 바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하며, 평등의 출발선을 한 걸음 더 앞당기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법안 발의에 적극 참여한 수많은 의원들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사유를 법안에 포함하여 법 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성소수자들은 15년 동안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주체였다. 동성애와 에이즈만 이야기하며 성소수자를 차별하게 해달라고 하며 법 제정 반대를 선동해온 이들에 맞서왔다. 성소수자들은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빈곤한 사람들과 각계의 시민사회 그리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등 각계 종교계와 연대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2022년은 법제정을 이뤄야 하는 해다. 국회는

평등을 염원하는 주체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실현하라.

2022년 1월 5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입니다.

평등법을 공동발의 해주신 동료 의원님 중에는 성소수자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와의 인연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커밍아웃을 해준 동료 덕에 바로 곁에 성소수자 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평등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소수자 분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들 중에 계십니다.

나를 나라고 떳떳이 얘기해 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당당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차별과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한 21대 국회의 책무, 바로 평등법 제정입니다.

평등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장애인, 이주민, 한부모, 비정규직 노동자 등 평등법을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인종, 장애, 출신, 가족형태, 종교,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어떤 것도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이 선언하는 평등권이 모두에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등법의 취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합의는 진작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갤럽 여론조사에서 “직장 동료가 동성애를 이유로 해고된다면 이 조치가 타당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1%가 “타당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은 이미 평등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소수자 아동·청소년들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평등법 제정을 미루고 성소수자 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성소수자 아동·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 또래집단에서 차별과 낙인을 겪으며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자기 혐오를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이 아픈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 실현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똑똑히, 크게 들려옵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평등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사람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한 평등법은 평등법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발언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차별금지법을 차별 조장법으로 만들자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덧씌워진 가장 원색적인 비난은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을 ‘옹호’라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인권 옹호법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사유를 제외한다면 차별금지법은 그저 ‘동성애 차별 옹호법’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꼭 집어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라는 차별금지 사유를 문제 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두 가지 사유에 의한 차별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명백하게 남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동성애자 시민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거나, 잘 다니던 직장을 잃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차별공화국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든 평등법이든 특정한 행위가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히 합리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공적 성격을 가진 교육이나 고용,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 행정서비스의 영역에서 차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들만 빼고 차별을 시정한다고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권은 모두에게 적용될 때 비로소 권리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비성소수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특정한 시민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곧 모든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잠정적 위협입니다. 우리 중 가장 차별받는 사람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만이 진정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벌써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 사회에 발의된 지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차별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2022년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온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 시민사회 발언 #1 고운(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안녕하세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인권영화제 활동가 고운입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43개의 성소수자인권운동 단위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누군가는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네요. “43개나 있다고?” 사실 더 많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는 단위도, 커뮤니티도,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성소수자와 그 지지자도요. 전화번호부나 메일링리스트로 다 적을 수 없는 수많은 시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차별금지의 원칙을 세우는 법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절대 제외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함께 사회를 가꾸는 시민이기에, 평등한 존재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있음은, 그 존재만으로도 증명됩니다. 이에 대한 합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 곁에 성소수자가 있다”는 앎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합의가 아니라, 나의 곁에 가족이, 친구가, 동료, 노동자가, 청소년이, 노인이, 여성이 있는 것처럼 성소수자가 있다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을 위해 우리는 오랜 기간 싸워왔습니다.

‘반대’라는 것은 반대 가능한 대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성소수자가 이렇게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반대’합니까? 이는 반대가 아니라 혐오입니다. 더이상 혐오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혐오에 굴복하며 쌓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어떤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선거 승리 말고는 그리는 미래가 없습니까?

정치는 할 일을 하십시오. 수많은 성소수자가, 수많은 시민이 차별을 드러내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을 만드는 이들로서, 본디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나의 곁에 성소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사실이 당연한 상식이 되게끔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에,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할 수 있는 미래에 재를 뿌리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것임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물려서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십시오.

평등한 세상을 향해,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나라를 위해 함께 갑시다. 이는 요청이 아닌 요구입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 시민사회 발언 #2 자케오 신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당신이 불의한 상황에서 중립을 취한다는 건, 압제자의 편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이자,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자케오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얼마 전에 별세하신 데스몬드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성공회 대주교님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할까 합니다.

그는 2007년 BBC와의 인터뷰를 비롯해, 2013년 케이프타운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천국이 있다면 거절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 발언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매우 명료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성소수자 혐오와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천국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한 겁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성서와 전통에서 말하는 다른 곳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故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함께 인종차별 철폐 투쟁에 앞장서며, ‘인종차별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인종 차별과 여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어떤 차별과 혐오도 신의 이름이나 뜻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또한 사회의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 구성원들을 위해 편견과 차별이 확산되는 걸 적극적으로 막고, 혐오와 배제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앞장서는 게 정의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선택해야할 길임을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교회와 사회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아니 우선적으로 배려 받고 존중 받아야 할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 길벗들을 편들고 연대하는 일에 교회와 정치가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가 먼저 따라간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여성 차별 그리고 인종 차별은 똑같이 우리가 믿는 신의 뜻을 거역하는 길입니다. 그곳에서는 결코 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혐오와 차별은 신과 같은 방향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은 혐오와 차별의 반대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환대와 연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앞장서는 목소리에 현혹되어 하느님의 꿈을 배반하는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하느님이 축복하는 환대와 연대의 길에서 동행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환대와 연대의 길을 시작하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첫 걸음’이 바로 포괄적인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평등법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는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 구성원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국 사회나 교회에서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로 취급받는 존재는 발도 못 붙이는 그런 교회라면 모르겠으나, 천주교나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는 다양한 모습의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 분들이 구성원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 함께하는 신을 알아차리는 교회와 신자 분들이 있다면, 평등법 제정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법임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 침묵이나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꿈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낯설게 만든 존재를 환대하고 연대하는 일에 적극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포괄적 평등법 제정에 가장 적극 앞장서야 할 정부 여당 정치인과 관계자 분들, 야당 정치인 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나이, 장애, 학력, 빈부, 인종,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으로 인해 차별 받는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 분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세 판단’이라는 이유로 여러 눈치를 살피며, 아직까지도 짝 붙들고 있는 평등법 제정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제 처음에 인용한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님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하며 마무리합니다. “당신이 불의한 상황에서 중립을 취한다는 건, 압제자의 편을 선택한 겁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와 장소,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첫 걸음인 평등법 제정.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정한 사회적 소수자를 지목해 놓고 갈 수 있다는 듯이 반복해서 위협하는 이 불의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압제자의 편을 선택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중립 기어는 압제자의 편에 서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시민사회 발언 #3 소주(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안녕하세요,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그리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앞에서 활동하는 소주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처음 발의가 되고 논의가 시작된 건 2007년, 약 15년 전이고, 현재에도 네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발의에 그쳐지고, 제대로 된 논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를 안했습니다. 21대 국회도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이라면서, 다했나면서, 기다려달라면서, 믿어달라면서, 그렇게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가 시민들의 평등을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선거시즌때마다의 유력한 후보들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수개신교 세력으로 위시되는 표의 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혐오에 굴복하는 방식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인격적으로 깎아내리고, 성소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국회에 초대하거나, 혹은 직접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차별하고 혐오하는 자들이 폭력의 근거로서 HIV/AIDS에 대해 비과학적이며 도그마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걸 방지하고 허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혐오에 굴복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가 소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논란', '성소수자 차별금지 찬반논란'을 만들어내고, 에이즈혐오와 낙인을 사회에 퍼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소수자들과 HIV감염인들을 위기상황으로 내몰며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 존재를 반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최근 2017-2020년에 걸쳐 진행된 세계가치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한국인 중 92.9%가 HIV감염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9명 혹은 10명이 전부다 이웃으로서 싫다고 응답한 겁니다. 이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가 평등을 뒤로 미룬 결과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먼저 움직여야 하는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저절로 평등해지지 않습니다. 마냥 기다리는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평등을 설득하고 인권을 지키자고 주장해내는게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 정치란 그런 것이고 그래야 합니다. 시민들이 먼저 평등버스를 탔고, 백만보 도보행진을 했고, 언론에 기고하고, 인터뷰를 하고, 농성까지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21대 국회도, 정치도 평등을 위한 길에 합류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누군 차별하면 안되는데 누군 차별해도 된다는, 그런 후진적 논란을 정치인들이 만들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선명하고 정확하게, 평등과 인권을 말하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를, 그런 정치인들의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모르겠다면 공부하셔야 합니다. 혐오와 폭력, 반인권적인 목소리에 단호한 자세로 정치인들이 먼저 맞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정치는 더이상 사람 차별하면 안됩니다. 이미 여기계신 대표발의 국회의원님들의 법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차별금지사유 항목으로 들어가있습니다. 21대 국회, 부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빨리 시작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시급합니다. 중요합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먼저입니다.